



[뉴스]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놓고
고심 깊어진다
02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코스닥
2449.54 (+65.26)	796.79 (+18.98)
금리 (연고채 3년)	환율 (원·달러)
3.536 (-0.007)	1373.60 (-7.20) (13일)



9월 무역수지도 적자 출발

관세청은 지난 1~1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6.6% 감소한 162억 달러, 수입은 10.9% 감소한 187억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13일 부산 남구 감만(사진 위) 및 신선대(아래)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시스

관리수지 적자 비율 3% 이내 강력한 재정준칙 연내 법제화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내년 본예산안부터 즉시 적용 방침

정부가 엄격한 재정 운용안을 담은 '재정준칙'을 연내에 법제화해 내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나라빚인 국가채무가 누적돼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엄격한 관리를 통해 방만한 재정 운용 여지를 차단한다는 의도다.

아울러, 쓰다가 남긴 예산인 세계잉여금은 최대한 나라빚을 갚는 데 쓰기로 했다.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비율도 현재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늘린다.

다만, 추 부총리는 "전쟁·재난·경기 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해 위기적 경제 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본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을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재정건전화대책 수립도 의무화하고,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한도를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는 시행령이 아닌 국가재정법의 법률로 규정해 구속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재정준칙 관리기준에 대한 국회심사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의한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 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며 "현재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도입하는 등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인플레이에 쪼그라든 전자 수요 반도체·가전 등 충격 불가피

전자업계, 3분기 실적 빨간불

메모리 반도체 가격 지속 하락세
하이닉스 영업이익 50% 하락 우려

경기 침체에 가전 소비도 급감
LG전자 전분기비 반토막 가능성

전자업계 3분기 실적 쇼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반도체와 가전 등 주요 시장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3분기 들어 하락세를 본격화했다. 수요가 대폭 쪼그라든 영향이다.

트랜스포스가 예상한 하락폭은 D램 15%, 낸드 30% 수준이다. 재고도 늘어나고 있어 4분기 이후에는 가격 하락으로 인한 '치킨게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계 3분기 실적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매출액은 전분기 수준을 지키겠지만, 영업이익이 10% 이상 쪼그라든다는 분석이다. 비트 그로스 역시 5% 이내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전 시장은 더 심각한 분위기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엔데믹에 더해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비는 더욱 크게 줄었다.

당장 국내에서는 주요 유통 채널인 양판점 실적이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최대 업체인 롯데하이마트가 2분기



미국 베스트바이는 최근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거뒀지만 가전 비중을 크게 줄인 덕분이었다.

에 적자를 간신히 면했지만, 상반기로 보면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3분기에도 적자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자랜드(에스와이에스리테일) 역시 적자 상황은 마찬가지다.

자체 유통 실적도 그리 좋지 않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서 삼성디지털프라자(삼성전자판매)가 올해 하이마트 실적을 넘어설 수 있다 예상하기도 했지만, 3분기까지 실제 사정은 양판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전언이다.

해외 시장은 더 심각하다. 미국 가전 유통사 베스트바이가 최근예상을 넘는 실적을 기록하긴 했지만 가전 등 비중을 크게 줄인 덕분이었다. 일렉트로룩스가 3분기 수요 급락을 예상하며 실적 충격을 미리 경고하는 등 가전 수요 절벽은 이미 현실이 됐다.

스마트폰도 처참하다. 7월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나 줄었다. 그나마 삼성전자가 갤럭시Z 시리즈를

새로 출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선전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폴더블폰 특성상 실적을 반등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그나마 사업 구성이 다양한 삼성전자는 매출을 전분기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영업이익만 하락할 전망이다. 메모리를 주력으로 하는 SK하이닉스는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0%, 50%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LG전자도 2분기 영업이익 대비 반토막날 것으로 추정된다.

4분기 이후 업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반도체 수요는 내년까지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월드컵 등 이벤트로 TV 수요 증가 기대가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수요도 회복되기 어렵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수요 감소에 따른 물류비 정상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변수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中 떠나는 기업들… 투자 미루거나 사업 축소

● 차이나 뉴스&리포트

엄격한 방역정책에 공급망 악화
우크라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도

중국이 길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에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은 물론 세계 최대 소비 시장으로 각광받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진출했지만 2년이 넘게 이어진 엄격한 방역 정책에 공급망 악화와 지정학적 갈등까지 겹쳤다. 약속했던 투자는 기약없이 미뤄졌고, 일부 사업은 축소 수순에 들어갔다.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

MP)에 따르면 선전 등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이른바 '웨강아오 다완취(Greater Bay Area)'에서도 여러 외국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계속 연기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했다.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각광받던 웨강아오 다완취는 세계 각국의 투자가 몰렸던 곳이다.

한 일본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일본 기업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며 "웨강아오를 첨단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한 어떤 지원책도 강경한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의 영향을 상쇄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중국에서 아예 철수하지는 않겠지만 투자를 늘릴 동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도 외국 기업들에게는 리스크 요인이다.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조르그 우트케 회장은 "정치적 요인들이 점점 더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실제 유럽 기업의 3분의 1 가량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투자처로서 중국의 매력을 약화시켰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민주당 "환율 불안 이유 민영화 시도, 결단코 막을 것" /사진 뉴스시스
- ▲ 이준석, 당측 가처분 연기 신청에 "소설이 5시간 만에 현실로"

- ▲ 韓·美, '북핵 대응' 확장억제전략협의체 4년8개월만에 재가동
- ▲ 청년 국정참여 확대… 기재·행안 등 7개 기관 청년보좌직 채용



- ▲ 尹, '오겜' 에미 감독·남우주연상 수상에 축전 /사진 뉴스시스
- ▲ 박진, 제주포럼 참석… 전기차 보조금·강제징용 해법 논의